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1년 10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CONTENTS

- 
- I** 대응 및 평가
 - II**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 III**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 IV**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 V** 의료·방역 대응 추진방향
 - VI** 향후 계획

I

대응 및 평가



'20.1.20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4차 대유행 진행 중



【참고】 코로나19 대응 경과

'20.1~3월



초기 기반 구축 1차 유행 대응

위기 경보 격상 및 거버넌스 체계 확립
(사회) 개인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방역) 특별입국절차, 진단시약 긴급 사용,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
(의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및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20.4~10월



대응체계 보완 2차 유행 대응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재정비
(방역) 질병관리청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법령 정비
(의료)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체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20.11~'21.2월



대응체계 개편 3차 유행 대응

(사회)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방역)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요양병원·시설 대응 강화
(의료) 수도권 1만 병상 확충, 특수 전담병상 운영



'21.3~'21.6월



예방접종 실시 4차 유행 대비

(접종) 요양병원·코로나 치료병원 부터 순차 시행
(사회·방역) 감염취약집단 추가발굴·선제검사
(의료) '4차 유행억제 및 대비방안', 日2만명 대응 의료체계 준비



'21.7~

예방접종 지속 4차 유행 대응

(예방접종) 1차 전국민 50% 달성(8.22.)
(사회·방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 운영
(의료) 수도권(8.13.)·비수도권(9.10) 병상확보 행정명령, 생활치료센터 확충 지속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3T 전략 등으로 건강피해 최소화



국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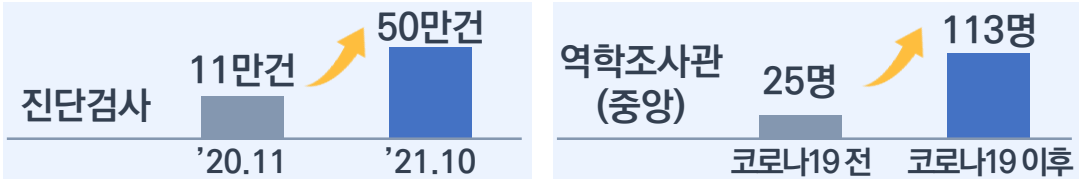
정부의 조치 선행하는 국민 반응



확산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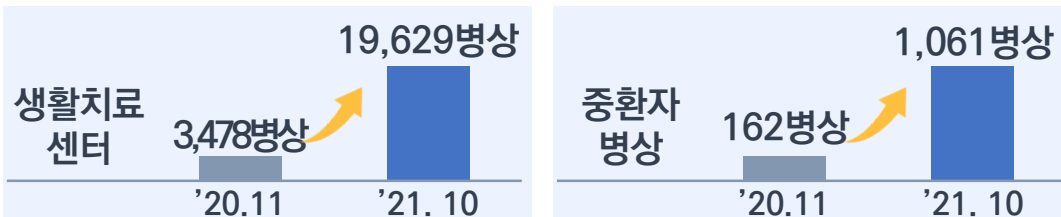
적극적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접촉자 격리

3T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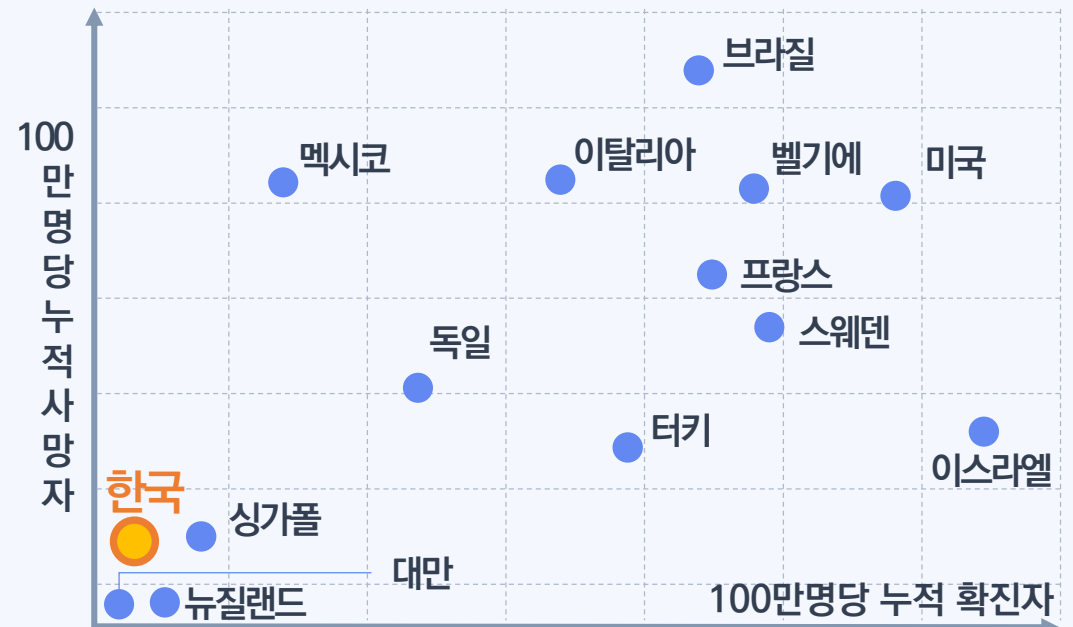
사망 최소화

모든 확진자 기관 내 치료 원칙, 의료자원 투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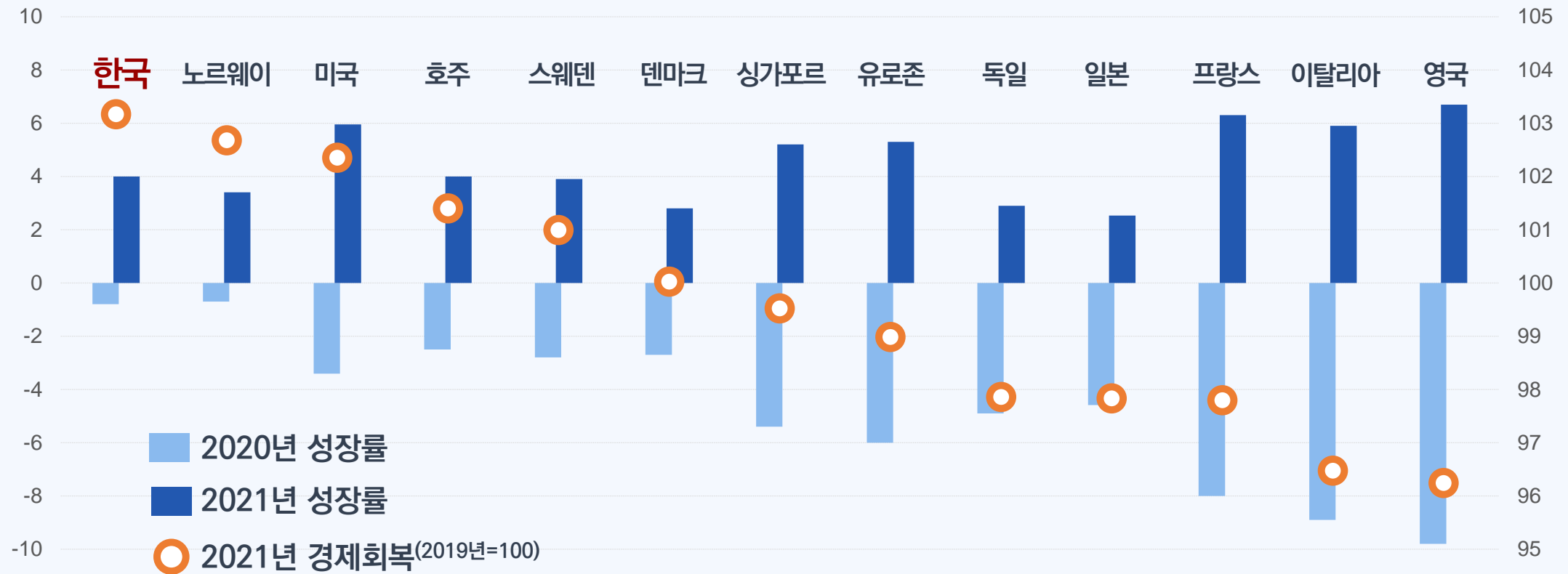


세계 최저 수준 확산과 건강피해 최소화

• 인구 100만명당 환자 6746명, 치명률 0.78% (10.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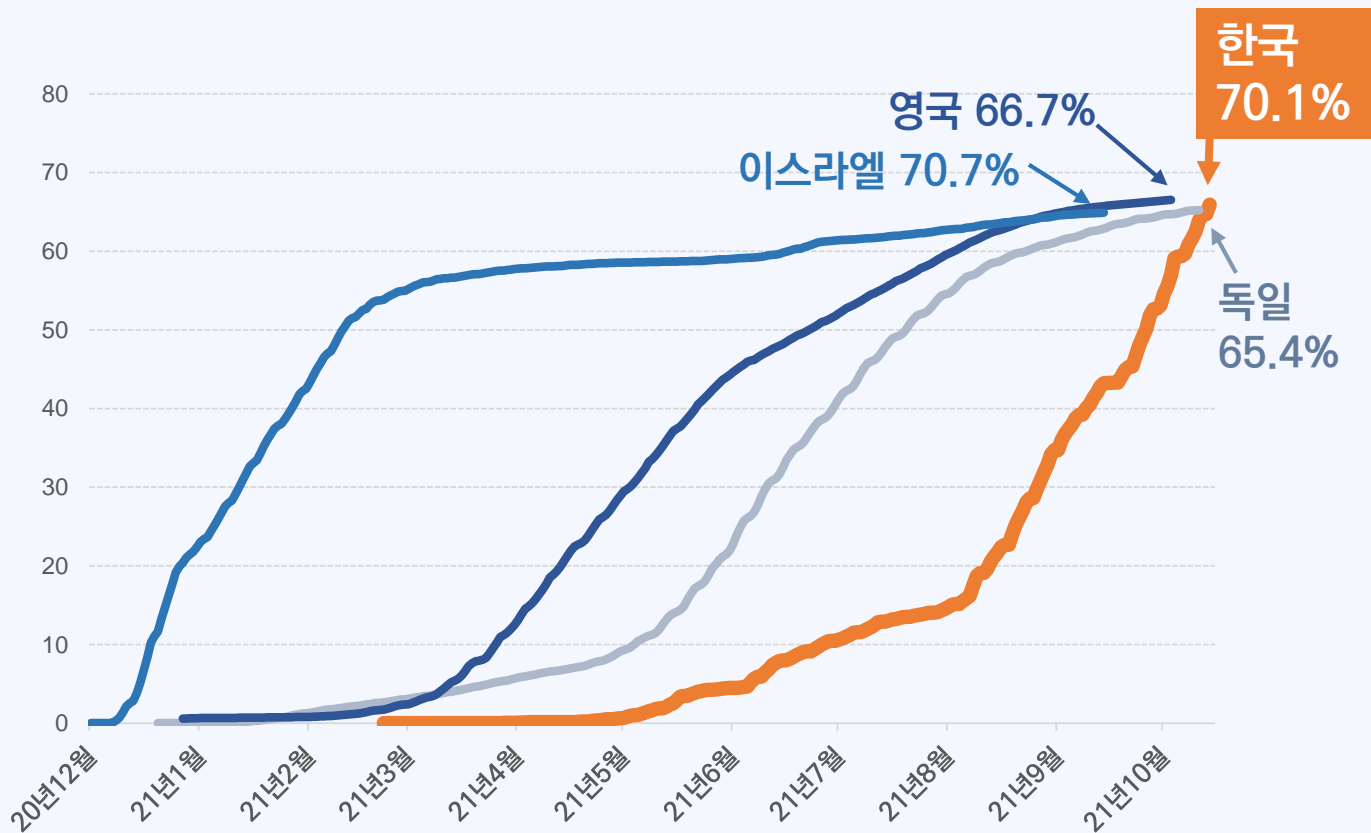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회복율('20~'21)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21.9)/IMF World Economic Outlook('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박사

일 평균^(10.16~22) 45만명 접종, 국민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

주요 국가 일자별 예방접종율 비교



The New York Times

How Asia, Once a Vaccination Laggard, Is Revving Up Inoculations

About 0.6 percent of fully vaccinated people who contracted Covid had.....

"Asia was always going to use vaccines when they became available."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지난 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예방접종 속도를 따라잡고 있다”

- 뉴욕타임즈('21.9.30)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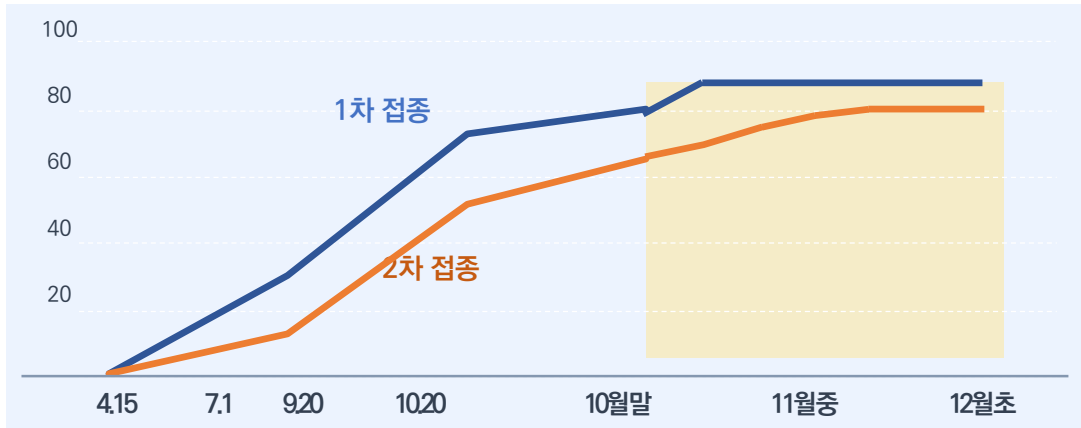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필요성



예방접종률 향상, 방역 전략 수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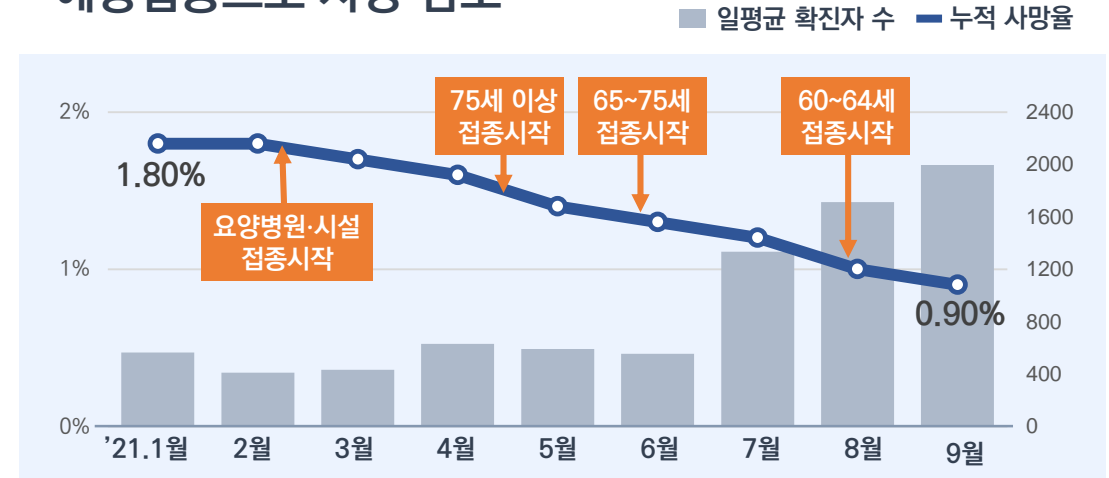
예방접종률의 상승

- 9.17 1차접종 70% 달성, 10월 말 2차접종 70% 전망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의료체계 부담 가중

자영업자 등 피해 누적, 사회경제적 부담 심화

- 경제, 교육·돌봄 등 각 분야 피해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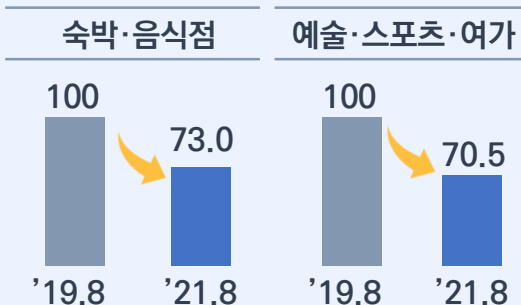


연간 약 **8%** GDP 손실
월 약 **13조원**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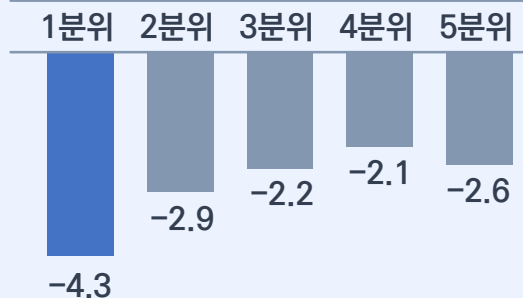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시, 한국은행

-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부담 심화

'19년 동기 대비 소상공인 매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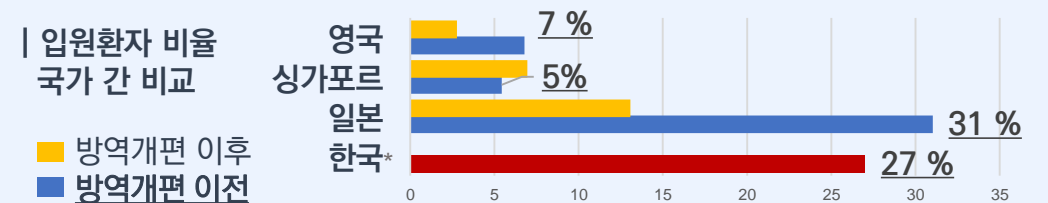


1개월 봉쇄조치 시
소득분위 별 연간 임금손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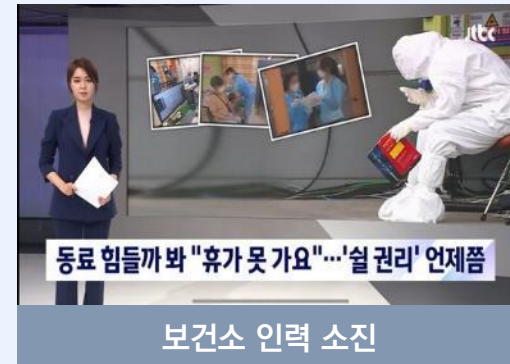
의료인 '번 아웃', 의료체계 부담 가중

- 코로나19 대응 위해 의료자원 집중 투입 중



* 최근 1주일간(10.12~10.18) 수도권 확진자 중 병원 배정 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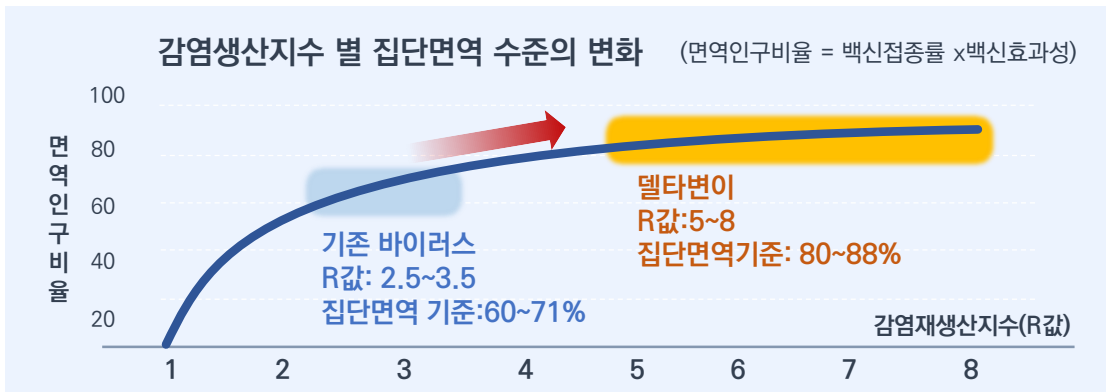
- 보건소 대응인력, 의료 인력 '번 아웃'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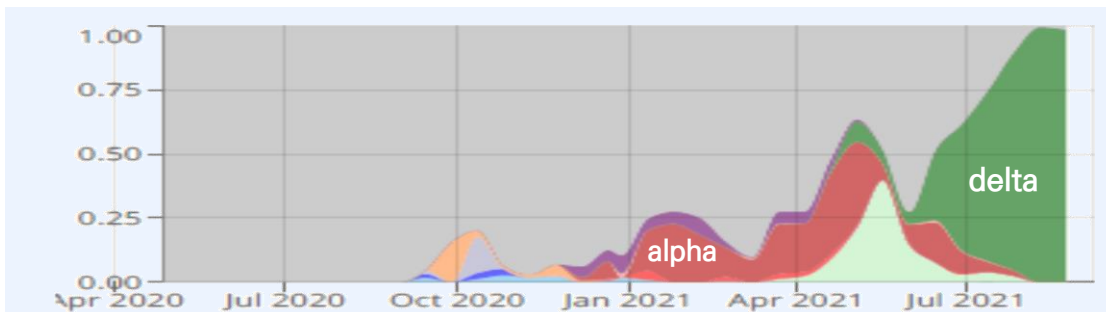
델타 등 새로운 변이의 위협과 약 1,100만명의 미접종자

전파력 높은 델타변이 확산

- 전파력 2~3배 이상, 집단면역 목표 상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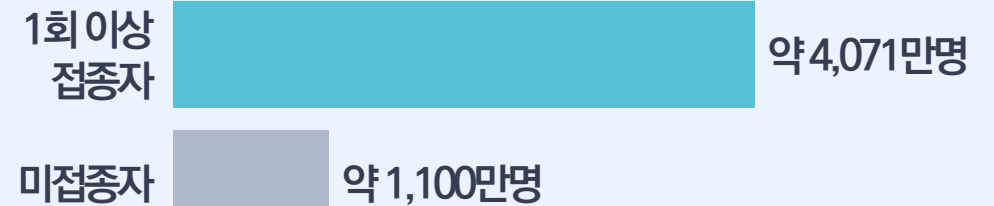


- 델타변이 빠르게 증가, 우세종 化(99.4%, 10.2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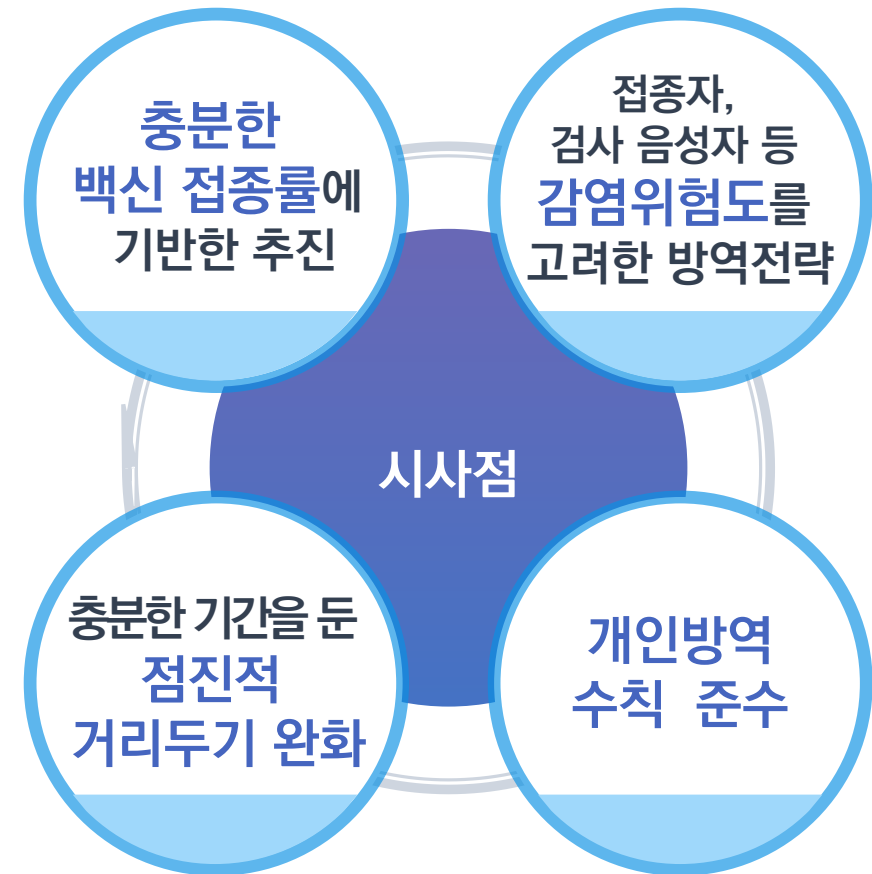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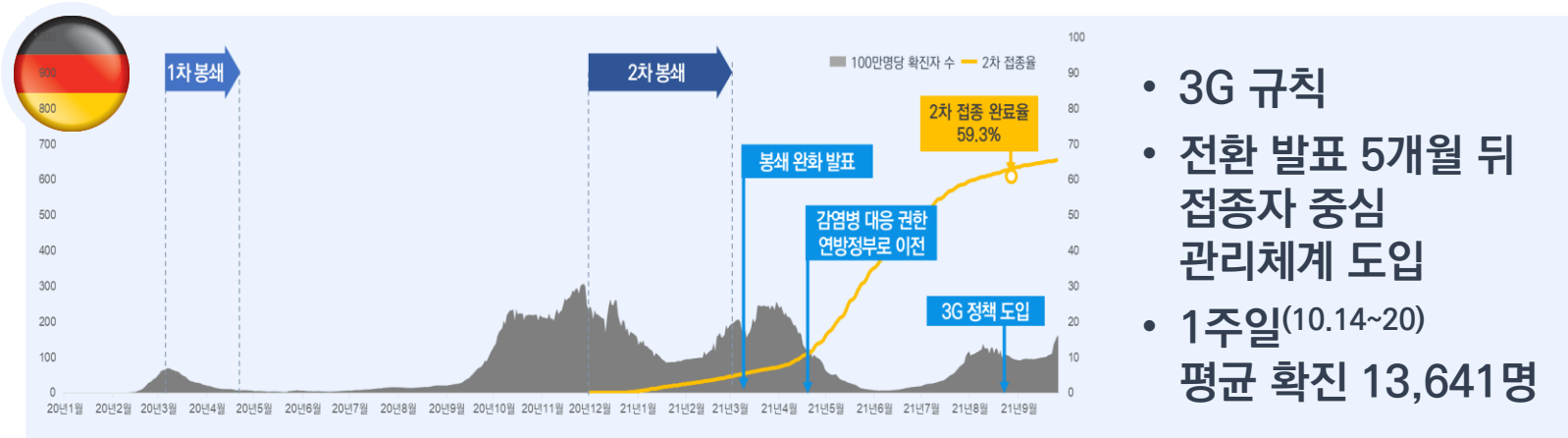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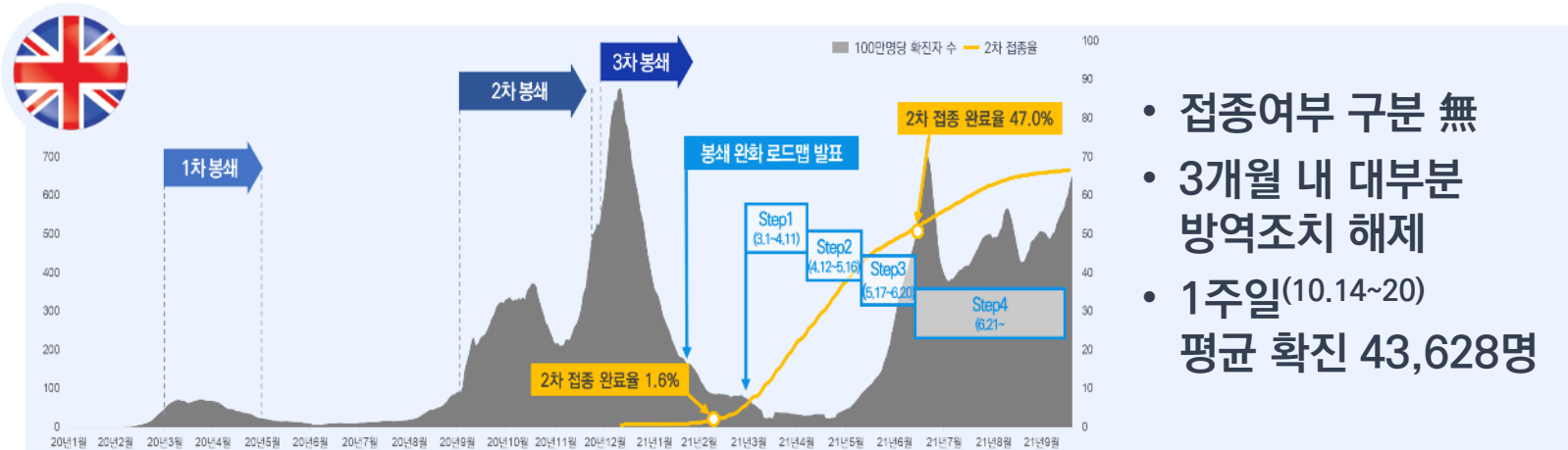


감염위험도 높은 인구군 존재

- 예방접종 80% 달성 시에도 약 1,100만명은 미접종 상태



선행사례 분석 시 감염 위험도 고려한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추진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방역
의료

경제
민생

사회
문화

자치
안전

‘점진적·단계적’ 회복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포용하는’ 회복

‘모두 행복한’ 일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함께 만드는’ 일상으로

IV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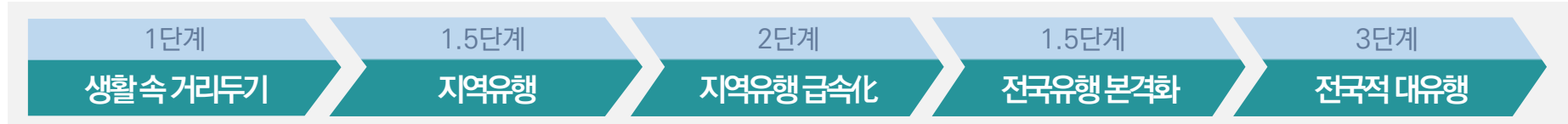
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경과

'20.2.29. - 사회적 거리두기 **최초 도입**

'20.6.28. - **단계별(3단계) 전환 기준 및 조치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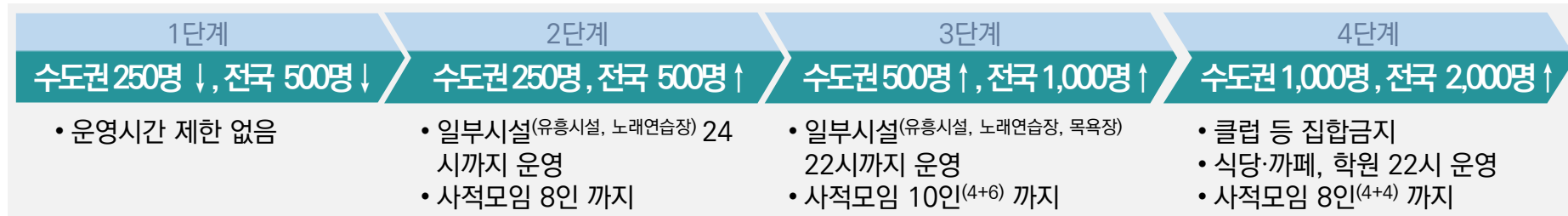
*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발생 수준(1→2단계), 급격한 대규모 확산(2→3단계)

'20.11.7 -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3→5단계), 시설·활동 위험도 별 방역수칙과 권역 별 대응 강화**



'21.7.1. - **단계 간소화(5→4단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

* 체계적 분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리원칙 수립, 지자체 자율성과 개인활동 관리 강화



② 개편 논의

논의경과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각 분과에 거리두기 개편방안 공유(10.18.)
- **사회복지시설**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수립 요청(10.19.)
* 이용 완화 계획, 접종증명제 적용 여부, 직원 중 미접종자 PCR 시행 여부 등
- **[생활방역위원회]** 접종완료자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 동의(10.19.)
- “생업시설 규제완화, 국민 생활 전반으로 논의 확대 필요”
- **전국 시·도, 관계부처**에 거리두기 개편 의견수렴(~10.20.)
-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10.21.)
* 유흥시설(적악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문체부), 목욕장업(복지부), 경륜·경정·경마장(농림부), 카지노(문체부)

주요 원칙

- 시설 별 편차 없는 **통일된 기준** 적용
- 예방접종을 외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사망자 수 등 다양한 기준 고려 필요
- 자영업자 중심 접근 외
취약계층,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등 사회·생활적 접근 방향도 고려
- 사망자 급증, 병상부족 등 악화 대비
비상대책 마련 철저

③ 추진 방향

중증·사망 발생 억제

확산 억제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화 예방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미접종자 보호

단계적 완화^{3단계}

예방접종률, 중환자실·병실 가동률,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 후 단계적 전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2차접종자만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고려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일상 속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 협회 등의 참여, 지자체 자율권 확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비상계획 수립

의료체계 여력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 중단,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④ 단계적 완화³단계 추진

전환시점과 기준

전환
시점

11월 초 부터
4주 + 2주 간격

전환
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⑤ 주요 추진 방안 - 다중이용시설

☑️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기 존		개 편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비수도권	22시/24시 제한 제한없음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식당, 카페	수도권 비수도권	22시 제한 24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비수도권	22시 제한 22시 제한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22시 제한	24시 까지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

⑤ 주요 추진 방안 - 다중이용시설

- ☑ 일부 고위험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며 방역 제한조치 해제
- ☑ 그 외 시설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강화하며 방역 제한조치 해제

고위험 시설^{1차 개편}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식당·카페

사적모임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싱가포르: 식당 등은 접종자·검사^{PCR}음성자 만 출입 허용, 카페, 실외식당은 접종 관계없이 2인 허용

그 외

기본 수칙 유지, 그 외 방역 조치 최소화

접종완료자 등 만 이용 시 인원, 취식 인센티브 적용

⑤ 주요 추진 방안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미접종자 보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목적

목적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미접종자 감염 확산 예방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 허용

대상

감염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 고려

① 접종완료자 ② 검사음성^{PCR}확인자
(예외) 아동청소년, 알려지 등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취약시설
보호

감염 시 사망위험 높은 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병원 면회 등은 접종자 중심
미접종자 직원 검사 의무화^{주1회}, 신규입원자 선제 검사

| 단계별 적용

1차 개편

• 일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5종

•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2차 개편

• 100인 ↑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 해제

3차 개편

⑤ 주요 추진 방안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외사례

	한국(안)	프랑스 보건패스	이탈리아 그린패스	독일 3G	덴마크 코로나패스	캐나다 백신여권
무도장/콜라텍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목욕장업	○	-	○ (스파)	-	-	○
경마/경륜	○	-	-	-	-	○
카지노	○	○	○	○	-	○
문화공연	-	○ (50인 이상)	○	○	○	○
스포츠관람	-	○	○	○	△ (축구장)	○
교육, 문화, 예술	-*	○	○	○	-	○
일반음식점	-	○ (전시회, 컨퍼런스)	○ (어린이 교육센터 제외)	○ (행사, 콘서트)	○	○ (행사, 파티, 워크샵)
의료시설	○	○	-	○	-	-

* 100명 이상 모임·집회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예정

⑤ 주요 추진 방안- 행사 및 집회

행사

100명 미만 행사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

100명 이상 행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미접종자 +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적용 가능		인원 제한 해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	3단계 50명 미만	500명 ↓ 행사 가능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 제한 無 대규모 행사 가능	기본 방역수칙 준수

⑤ 주요 추진 방안- 행사 및 집회

사적
모임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 3차 개편 시 해제

현 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모든 다중 이용시설 수도권 4명+4명 비수도권 4명+6명	접종구분 無 사적 모임 10인 까지 가능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제한 해제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⑤ 주요 추진 방안 - 일상영역, 감염취약시설

종교

- 정규 종교활동 확대, 고위험 행위 단계적 완화
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50% 포함 가능, 접종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학교

- 대면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 방역 지원조치와 함께 교육 결손 회복 추진

사업장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적정화
- 위험사업장 자율방역, 환경개선

군

-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 일상회복

감염 취약 시설

감염 시 사망 위험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 접종 완료자 중심 이용
- 감염취약시설 보호강화

- ①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 ② 미접종직원·간병인력 주1회 PCR검사 의무화
- ③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

⑤ 주요 추진 방안- 일상 속 방역 실천

☑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 방역 실천 강화

기본 방역수칙

핵심수칙 의무화

- 실내 마스크
- 전자출입명부·안심콜

* 마스크

- 1차 개편 시 현행 유지
-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 검토



자율 준수

자율 준수 노력

- 핵심수칙 위주 홍보
- 관련 협회단체 자율적 노력 유도
- 다빈도 위반 집중점검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
지역 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지역 자율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 별 방역조치 강화
- 지역 내 일상회복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후 일상의 변화

	기 존	개 편
음식점 카페	매장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관람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워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같이 앉기, 팝콘·음료 허용
헬스장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후 온종일 이용 및 샤워 가능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접종 구분 無 정원의 50% 관람, 응원금지 접종자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 가능
기념식 각종 행사·집회	개최 불가	접종구분 無 100명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친구, 가족 모임	8명 ⁽⁴⁺⁴⁾ 까지만 가능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無

⑤ 주요 추진 방안- 비상계획 수립

비상계획 주요 목적과 기준

목적

- 일시적인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 안정화, 일상회복 지속

검토 기준

- ①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80%)
- ②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 ③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검토 절차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 주요 조치(안)

미접종자 보호강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개인 간 접촉

- 사적 모임 제한 강화
- 행사 규모·시간 제한

취약시설 보호

-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 종사자 선제검사

의료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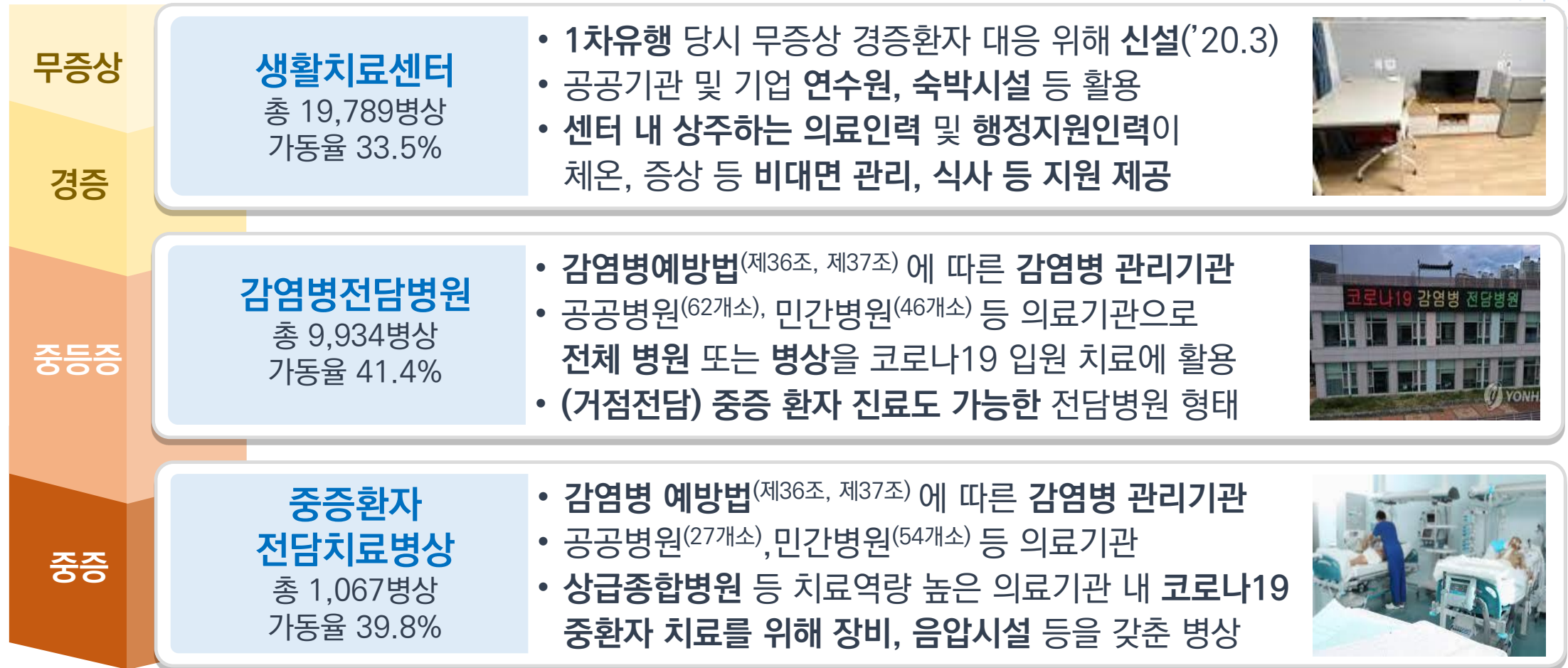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



의료·방역 대응 추진방향



① 의료대응 현황



* 10.23 기준

① 의료대응 추진방향

	현행 의료대응체계 내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	지역사회 의료자원 활용·협력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구축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한 환자 조기발견, 중증화 방지 -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신속한 진료 프로세스(“출발부터 진료까지”) • 생활치료센터는 재택과 입원 치료의 완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별 전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에서 중등증 환자까지 진료 - 분만, 수술 등 특수환자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는 1차의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구치료제 개발 등 외래 진료 여건 갖춰지는 경우
경증			
중등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 정비 • 중증-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한 병상 사전 파악, 폭발적 확산 시 신속한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진 교육, 원격 협진, 전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 환자는 종합병원
중증			

① 의료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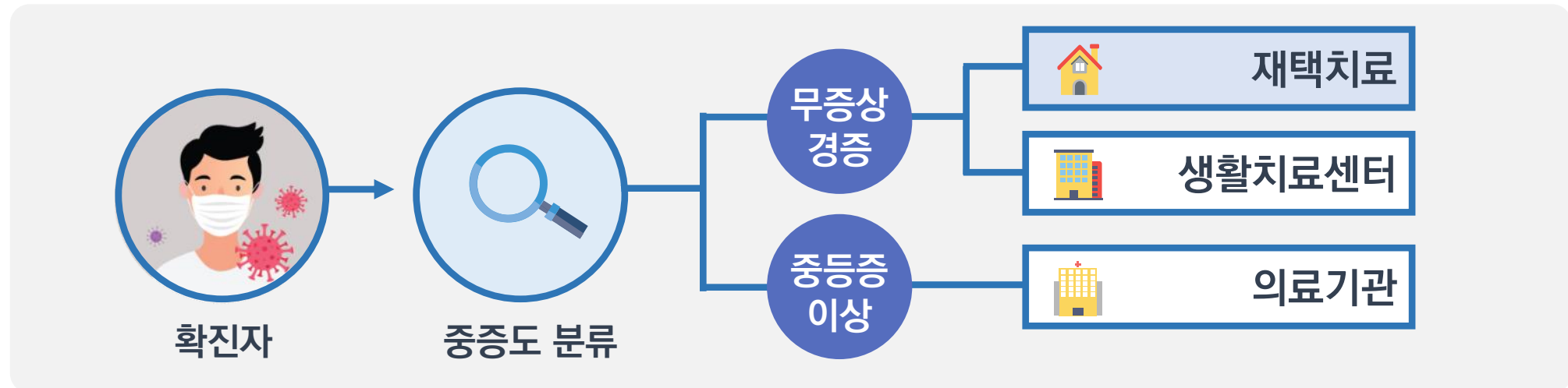
나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재택치료

일반 경증·무증상(고위험군 제외)
⇒ 전체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 감축



① 의료대응

㉔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대상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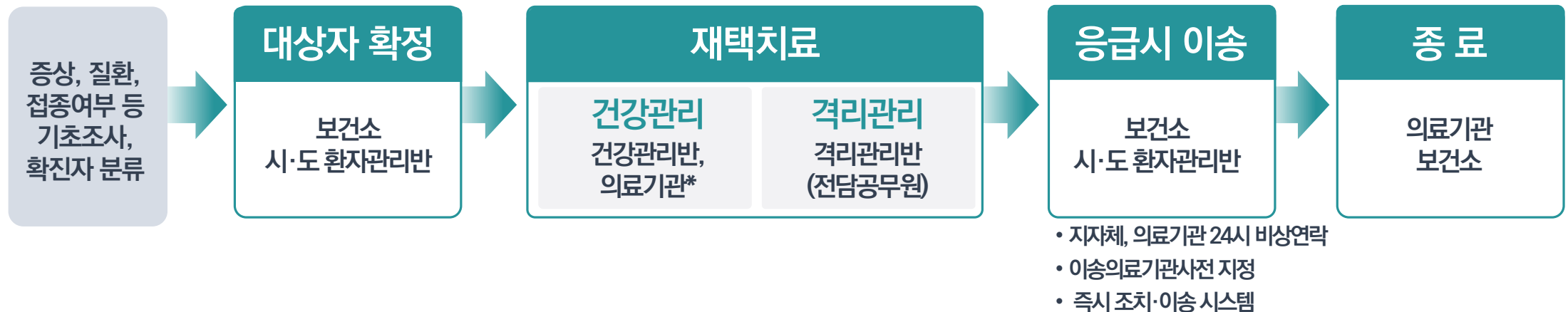
* 제외 대상

-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 필요 환자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노숙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추진
체계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

- * (건강관리반) 보건소 + 행정인력,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
- (격리관리반) 기존 격리관리 담당부서 등 활용, 격리관리 총괄





HR(Home Recovery) Program for COVID-19 Patient

– 단기치료센터에서 일일 확진자의 최대 40%가 재택치료

✓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환자는 원격의료 병원·앱 선택 가능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완료, 만 12세~69세, 경증무증상,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독립된 방에서 자가 격리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취약자 없는 경우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2회 온라인 바이탈 일지 작성, 증상 별 의료서비스 이용 권고• 재택 회복 버디(HR Buddy) 배정 정기관리, Q&A, SOS,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가족 구성원 등록(QO Registration of Household Contacts) 가족 구성원도 10일 간 격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환자가 원격 의료 제공 병원과 원격 의료 앱 선택)<ul style="list-style-type: none">✓ MOH의 원격 의료 e-트레이닝 및 조치사항 준수를 선언한 병원 또는 의료진✓ 언제든지 의사와 화상 상담 가능(24시간 상주), 비대면 배송을 통한 약물 전달(직접/약국)
일상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차 자가 PCR 테스트 후 7일차 일상 활동 재개 또는 10일차까지 격리 유지
소독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소독에 대한 지침 연결 QR코드/링크 제공
법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명령 위반 시 초범은 최대 \$10,000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 또는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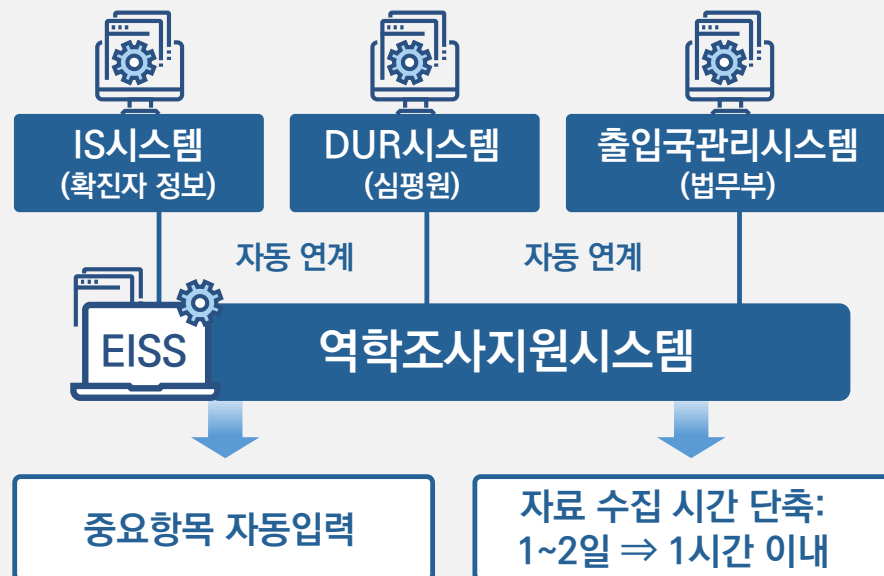


② 방역대응

가 역학조사 역량제고 및 효율화

역학조사 역량제고·효율화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효율화



나 진단검사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대상·방법 조정

- 미접종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지속
- 접종자는 주기 완화, 검사법 다양화 등



검사량 급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 유증상자·접촉자 등 필수검사에
PCR 역량 집중
- 신속항원검사 등 보완 활용

다 효율적인 접촉자 관리 체계 개편

✓ 접종력에 따른 관리 차등화

	접종완료군	접종미완료군
접촉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자 + 일상접촉자
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자 격리 제외 • 일상접촉자 능동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접접촉자 격리(10일) • 일상접촉자 능동감시 + 최소 2회 검사
고위험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생활시설 - 주기적 선제검사, 밀접접촉자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다수 생활시설 - 신속 대응, 포괄적 접촉자 선정

라 검역 및 해외입국 관리

✓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 개선

- 기존 5단계 ⇒ 신호등(3단계)



- ① 내국인 단기출장 후 입국시 격리면제
② 지방공항 개항시 항공편 우선 검토 등

- ① 항공편 운항제한

- ① 비자발급제한
② 항공편 운항제한
③ (장기외국인) 재입국시 제한
④ 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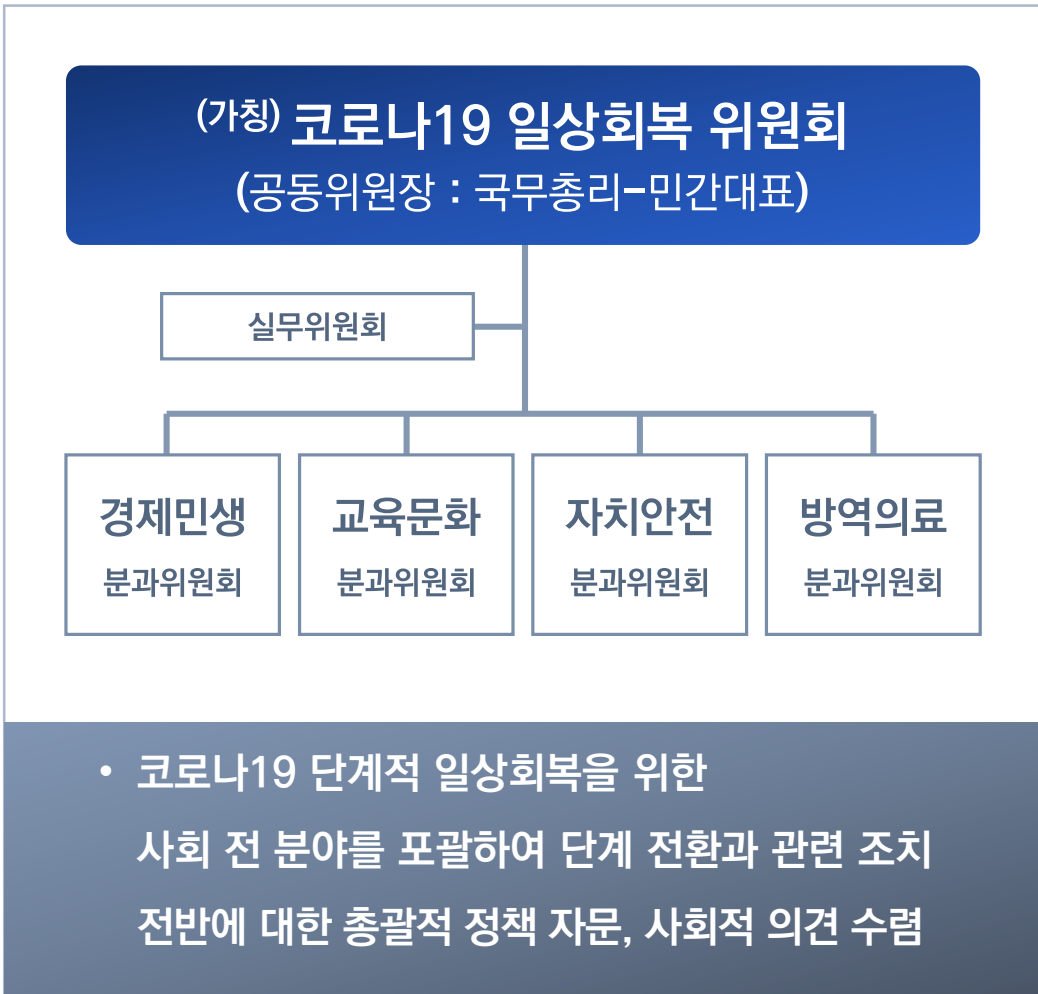
IV

향후 계획



① 사회적 논의

| 사회적논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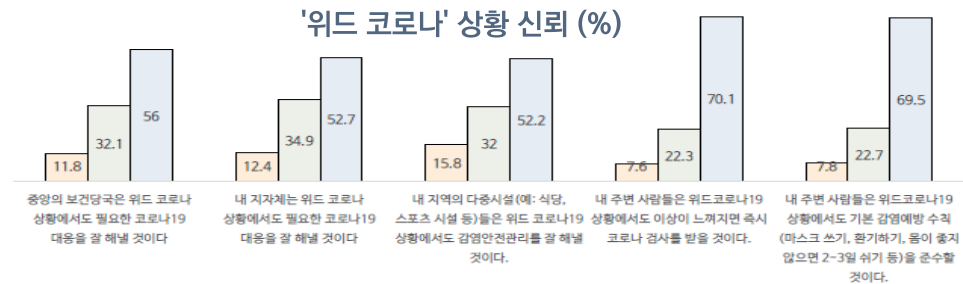


| 대국민 의견 수렴

1차 전문가 토론회 ('21.10.1)



대국민 인식조사 ('21.10.5~8)



2차 전문가 토론회 ('21.10.22)



② 주요 일정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 (10.27)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2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 논의 지속(11월~)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 내) 중심으로 각 분과별 일상회복 아젠다 심층 논의 및 추가 발굴

③ 통합적 단계적 일상회복

경제 민생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 기업 및 금융분야 이슈대응
- 고용노동 분야 이슈 대응 등 지원대책 마련
- 소비 측면의 코로나19 대응
- 주요국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사회 문화

- 학교교육 활동 확대 위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 사회문화업계 회복지원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
- 국민 일상회복 위한 문화치유
-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극복, 교육회복 지원

자치 안전

- 지역 사회 참여형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 지역 일상회복 추진체계 구축
- 골목상권, 소외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특화 일상회복 선도사업 발굴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감사합니다

